



‘경로의존’의 뒷에 갇힌 지역언론학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3대 ‘구성의 오류’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상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지역언론학은 다른 분과에 비해 미디어 이외의 나머지 사회를 짚은 어둠 속에 낡혀진 안 될 필요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유리된 채 지역 미디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언론 연구가 미디어를 넘어서 전반적인 지역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면 연구 주제가 풍요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미디어만으론 규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미디어에만 집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역언론은 물론 지역언론학도 경로의존의 뒷에 갇혀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3대 ‘구성의 오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언론학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 등 세 가지 관행은 지역의 이익과 개인이나 가족으로서의 지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구성의 오류’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언론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구성의 오류’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언론학이 ‘미디어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핵심어: 지역언론, 지방소멸, 내부식민지, 경로의존, 구성의 오류

* kjm@jbnu.ac.kr. 주저자, 교신저자.

** sm@socialframe.kr, 공동저자.

1. 서론

“언론학의 최대 약점은 미디어를 중시해 여기에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사회는 짙은 어둠 속에 놔둔다는 것이다.”

영국 언론학자 제임스 커런(James Curran, 2011/2014, 61쪽)의 말이다. 학문의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를 위해 언론학자들이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불가피하거나와 당연하다는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언론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도 지역언론학은 비교적 규범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재영·양선희, 2015; 원용진·황상현, 2011; 임영호, 2008). 이런 규범성과 당위성의 바탕엔 지방이 중앙의 ‘식민지’로 전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으며, 지방을 명시적으로 ‘내부 식민지’로 규정한 일련의 연구는 그런 전제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강준만, 2015b; 문종대·안차수, 2013; 문종대·이강형, 2005; 이한웅·엄기열, 2010; 장호순, 2015). 그렇다면 지역언론학은 다른 분과에 비해 미디어 이외의 나머지 사회를 짙은 어둠 속에 놔두지 않을 필요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많은 연구들이 한국사회의 구조적·정책적 맥락과 유리된 채 지역언론 자체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미 10여년 전, 이 문제점을 지적한 임영호(2008, 10-11쪽)는 “비록 연구의 소재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데에 설정하더라도 이를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이 널리 실천된 것 같지는 않다. 김재영과 양선희(2015, 188쪽)는 그 이유의 일부를 ‘협소한 기준으로 운용 중인 학술지 심사 시스템’에서 찾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학술적 엄밀성을 교조적으로 추종한 대가로 학문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훼손하고 현실세계의 개선을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사실 이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지방대학들의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을 찾는 많은 지역언론인들은 현실에 한 걸음 다가서는 지역언론 연구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음에도 교수들은 그 ‘자산’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이들에게 학술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학위 논문을 쓸 때에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한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연구주제는 이게 아닌데 워낙 선행연구도 없고 관련이론을 찾기도 힘들고 해서 주제를 바꿨어요.”¹⁾ 지역언론인들이 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닌데, 학위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경험과 나름의 대안을 자유롭게

쓰게 하면서 최소한의 형식만 요구하는 게 진정한 산학협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는 지역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도 선행연구나 관련이론이 없는 주제는 논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언론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에 편중돼 있으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최현주·이강형, 2008), 이 또한 논문이 요구하는 ‘형식의 독재’ 때문이다.²⁾ 임영호(2013, 30-31쪽)가 역설한 “오류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통한 탐색과 시행착오를 학문학기의 일상적 부분으로 수용”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역언론 연구가 규범적 가치로 중시하는 ‘지역성(localism)’의 정체에 대해선 이미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원용진·황상현, 2011; 임영호, 2002, 2008; 조항제, 2006; 한선·이오현, 2012), 지역성에 내재돼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는 비교적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연구가 미디어에 집중해 나머지 사회를 짚는 어둠 속에 놔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는 서울 미디어에 압도돼 영향력이 미미한 반면, 지역민의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서울에 비해 더 활발할 뿐 아니라 지역적 삶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고 모임, 취미 동아리 모임, 종교적 모임, 시민운동, 관변단체 활동 등이 야말로 지역에서 전통 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 ‘감성 공론장’ 또는 ‘문화적 공론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외면되고 있다.³⁾ 지역언론 연구가 미디어를 넘어서 전반적인 지역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겠다고 들면 연구 주제가 풍요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미디어만론 규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미디어에만 집착해야 하는가? 이 의문은 다음 의문으로 연결된다. 지역성은 지역 중심의 개념인가, 아니면 지역민 중심의 개념인가? 우리는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1) 이는 박동숙(2008, 117쪽)이 직접 들은 일부 대학생들의 말을 소개한 것이지만, ‘이론의 빈곤’이라는 지적을 받은 하는 지역언론 연구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2) 안수찬, 민혜영, 장바울, 그리고 박재영(2015)이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논문 그 자체의 완성에 목적을 두는 저널리즘 연구의 고정된 패턴, 즉 기존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한 뒤, 양적 방법을 적용해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하거나 기사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3)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 연구가 그 공백을 다소 메우곤 있지만, 본 연구에서 문제삼는 미디어는 지역언론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전통 미디어다. 감성 공론장은 “근대 공론장 개념에 전제로서 함축되어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개념 도구”로서 “핵심적 특징은 암묵적이고 미세하지만 광범하고 근면한, 감정과 경험의 소통 과정에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김예란, 2010, 149쪽). 문화적 공론장은 “감성적 상상력과 이상적 논쟁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협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생활에 일종의 모델을 제시해주기도 한다”(조흡·오승현, 2012, 859쪽).

이익이 같을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지방대학이 쇠락하는 건 지역의 손실이지만,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건 지역민의 이익이다. 각 가정이 누리는 이익의 합산이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는 지방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중심의 연구로는 다루기 어렵다. 미디어가 그런 ‘구성의 오류’에 대해 어떤 보도를 하는가를 내용 분석으로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내용 분석을 할 만한 ‘건수’가 워낙 작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미디어가 취하는 기본 자세 또는 내면화한 ‘아비투스(habitus)’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양적 방법론의 그물로 포획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그건 ‘인상 비평’ 수준의 ‘잡글’로 간주돼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저 사석에서의 잡담으로만 소비될 뿐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는 기존 지역언론 연구의 틀이나 방식으론 다루기 어려우며 지역언론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처지는 바로 ‘경로의존’의 덫이다. 내부 식민지 체제가 경로의존으로 인해 유지·강화되듯이, 지역언론과 지역언론 연구 모두 같은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3대 ‘구성의 오류’를 지역언론과 연계해 논의함으로써 탐구하고자 한다.

2. ‘경로의존’과 지역언론

경로의존(經路依存: path dependency)은 한 번 경로가 결정되고 나면 경로 이용의 관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 때문에 경로를 바꾸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탈리(Tilly, 1984; 김경일, 1998 재인용)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결과가 나중 시점에서의 가능한 결과들을 제약한다는 의미로 ‘경로의존’ 개념을 사용했다.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적 과정들에서 시간과 공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웰(Sewell, 1996; 채오병, 2017 재인용)의 포괄적 정의에 따르면, 경로의존은 “시간상 앞서 발생한 사건이 이후 발생하는 사건 연쇄의 가능한 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201쪽). 그간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로의존은 주로 행정적 규제 등과 같은 정책연구에 많이 활용돼 왔지만(권장원, 2012, 2017; 김성수, 2013; 김종석·강은숙, 2013; 신동호, 2017; 이상빈·박은병, 2010; 정인숙, 2013; 정준호, 2006),⁴⁾ 이 개념은 지

역언론을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간 유지·강화되어 온 내부 식민지 체제라고 하는 경로가 지역언론의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역언론 연구자들은 당위론적 입장에서 지역 미디어 콘텐츠의 지역성을 강조하지만,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성을 반기지 않거나 거부한다. 지역민들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을 떠나 중앙에 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민들도 자신이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슈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미디어 콘텐츠의 지역성을 적극 수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오히려 예외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역민의 삶은 중앙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김만흠(2006, 19쪽)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방인은 잠재적인 중앙인인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보도를 많이 하면서도 평상시에 ‘지방 소멸’에 일조하는 보도 프레임을 유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지역민이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사실상 지방소멸에 가담하는 ‘공범’이기도 하다는 걸 의미한다.

지방소멸론은 일본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마강래(2017)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며,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 중소도시라고 예측했다. 아니 그는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고,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지방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물론 지방의 쇠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도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도 그 도시의 도로나 수도, 전선, 통신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도시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 있기 마련이며, 게다가 똑같은 면적에 절반의 인구만 살게 되면 재정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예산을 뺏아 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결국 국가 경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 다른 연구 결과들도 이런 음울한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다(권승준, 2018; 오윤주 외, 2018; 유선종·노민지, 2018; 윤성민, 2016).

4) 그 이유에 대해선 황용석(2011)의 다음 설명이 탁월하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행정적 규제들은 경로의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경로가 형성되면 이 중심 경로를 기반으로 가치를 쳐 나가게 된다. 중심경로의 가치가 복잡해질수록 전환비용이 커져서 경로를 바꾸기 어려워진다. 규제권한을 가진 행정기구는 기존 경로의 안정성 또는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 결과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기구를 확장하여 대처하는 방식을 택한다.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고, 규제대상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 조직을 성장시키는 방편이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 자체의 정당성을 고민하기보다는 기구의 존재감과 이익을 담보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규제범위’ 및 ‘관할권의 확장’을 도모하게 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반세기 넘게 계속 심화돼 왔지만, 흥미롭고도 놀라운 건 개발독재 시기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최장집, 2002, 27쪽). 5년 임기를 가진 정권이 단기적 성과를 얻기 위해 기존 경로를 수정하려 하기보다는 경로의존의 원리에 충실한 노선과 정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정권들조차 그럴진대, 지방민, 특히 청년들이 권력과 부와 취업기회가 집중돼 있는 서울로 몰려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조영태(2018)는 “지방 청년의 수는 크게 주는데 서울의 청년 집중은 심화된다”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밀도가 높아지면 재생산을 꺼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고 말한다.⁵⁾ 이런 상황에서 지역언론은 청년들이 서울로 탈출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민관합동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와 주장을 하는 것이 옳겠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청년들을 서울로 더 많이 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는 알고 있지만, 또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선 기존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정형화된 패턴의 ‘잠김효과(lock-in effect)’ 또는 ‘매몰비용효과(sunk cost effect)’ 때문에 기존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간 많이 논의돼 온 지역공동체나 지역공론장이 지방엔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기적 연고단체 중심으로 파편화 된 가운데 왜곡돼 있다는 걸 시사한다.

사실 그간 지역언론은 ‘절망상태’에 처해 있다는 진단, 특히 신문은 관(官)을 대상으로 한 ‘관공서 신문’ 또는 ‘공무원 신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강준만, 2008, 2015a; 남궁협, 2018; 문종대·안치수, 2013; 한선·이오현, 2011). 심지어 “광고 홍보비에 빨대대고 기생하는 ‘빨대 신문’”이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얻기도 했다(권혁남, 2008).⁶⁾ 이런 상황에서선 굳이 경로의존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소수일망정 선의의 지역 언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들 역시 어쩔 수 없는 경로의존의 탓에 갇혀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언론이 ‘절망상태’에 처해 있다면 그들이 경로의존의 탓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도 가능할 것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의 의제설정엔 근접하는 최소한의 문제 제기 역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5) 이어 조영태는 “앞으로 출생아 수는 지금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우리는 2020년 혹은 이듬해부터 20만 명대, 2020년대 중후반부터 10만 명대의 출생아 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는 부동산 정책과 지방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학평가 제도를 볼 때 정부의 선택은 현상 유지임이 틀림없다. 곧 전국의 대다수 청년은 서울에서 ‘멋진 싱글 삶’을 즐길 것 같다.”

6) 똑같은 ‘지방’이라곤 하지만 지방 내에서 지역언론의 활동 정도나 수준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비판은 지역언론의 경제적 처지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호남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기대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언론을 지배하는 경로는 내부 식민지 체제하의 모든 제도와 관행이지만,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정치, 교육, 소비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관행을 들 수 있다. 그 3대 관행은 1)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2)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3)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다. 이 세 가지 관행은 지역의 이익과 개인이나 가족으로서의 지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구성의 오류'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역언론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구성의 오류'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기존 지방소멸 극복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기존 경로의 수혜자들을 가리켜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자 할 때에 '기득권 타파'를 외쳐대곤 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탐욕이나 음모를 연상하게 되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해도 좋을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과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 bias)'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현상유지 편향은 사람들이 이해득실의 문제를 떠나 현재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 손실 회피 편향은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서의 문제까지 서둘러 탐욕이나 음모로 간주해 '적'의 수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현상유지 편향'과 '손실 회피 편향'은 개인과 가족 중심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방민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타파해야 할 기득권에 그런 의식과 행태를 보이는 지방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을 향한 비판과 요구만으론 지방소멸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지역균형발전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3. 3대 '구성의 오류' 사례 분석

개인이 불황에 저축을 늘리면 재산 증가에서 비롯된 안전감을 느끼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소비가 줄어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다. 경제학자 케인스(Keynes, 1936; Cassidy, 2009/2011 재인용)가 개인행동의 논리와 전체 경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예시한 이 역설은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된다. 케인스에게 '구성의 오류'는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체와 부문을 혼동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케인스의 이론은 ‘합리적 비합리성’,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합리성을 핵심으로 한 것이었다(213-226쪽). 반세기 전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먼은 〈워싱턴포스트〉(1963, 1, 30) 칼럼에서 재정 정책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구성의 오류’를 이해시키는 데엔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Goodwin, 2014, p.324 재인용), 리프먼이 그런 개탄을 한지 한 세대를 넘어 거의 두 세대가 지났음에도 ‘구성의 오류’는 여전히 재정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외면되고 있다. 2008년에 벌어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최대 원인이 바로 ‘구성의 오류’였다는 게 그걸 잘 말해준다.⁷⁾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합리적 비합리성’은 인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일어나지만, 경쟁적인 쫓림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매년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 벌어지는 지역축제가 ‘사람 없는 축제’라거나 ‘묻지마 빛 축제’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이나 지방의 많은 산업단지 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그 좋은 예다.⁸⁾ 이미 1960년대 후반 그레고리 헨더슨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지적한 ‘중앙과 정상을 향한 맹렬한 돌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한국사회의 문법이다. 헨더슨(Henderson, 1968/2000, 44쪽)은 “이런 사회는 전형적으로 원자화된 개체로 구성되어 있고, 개체 상호간의 관계는 주로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로 규정되며, 엘리트와 일반대중은 그들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집단의 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대결하게 되고, 여러 사회관계의 비정형성과 고립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이런 점이 ‘사회적 증거(social proof)’의 힘을 증폭시켜 경쟁적인 쫓림 현상을 낳음으로써 ‘구성의 오류’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이제부터 그런 ‘합리적 비합리성’이 두드러지는 3대 관행을 1)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2)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3)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⁹⁾

7) 구형건, 박정숙, 그리고 정재용(2015)은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에 기여한 각종 제도와 규범들은 합리적·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각 부분에선 최적의 결과를 낳았지만, 전체적으로n 파국을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금융시장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합리적·과학적 사고 못지않게 ‘군중심리’나 ‘야성적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돼 확산되는 데 다른 부분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8) 마강래(2018, 55쪽)는 지방에서 자주 일어나는 ‘구성의 오류’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들을 보자.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인구나 재정규모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그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그맣게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활용해 청년기업을 유치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한다. 크게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키우겠다고 한다...이 모든 정책들은 어쩌면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온 나라가 빈 산업단지와 사람 없는 축제로 가득할 것이다.”

1)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지방이 파편화된 가운데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 중심으로 사고하는 지방민들의 각자도생 투표 행태는 내부 식민지를 존속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선거는 서울이 지방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나 서울에 줄 있다”는 ‘줄 과시론’이다. 지역에 중앙 예산 끌어오고 정부사업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줄을 이용하고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의 성패가 중앙의 지원 정도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줄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지방=중앙 정치의 식민지’라는 도식이 언론의 기사 제목으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상식이 된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직전(直前) 대선의 연장전 또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만 간주되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몸종’으로 전락했다는 것 또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강정운, 2014; 강준만, 2015b, 2019; 경향신문, 2014, 6, 9, 2018, 4, 26; 변창흠, 2018; 이기우, 2017; 전상인, 2014; 중앙일보, 2014a, 2, 3, 2014b, 6, 6).

후보가 서울에 어떤 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투표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선거와 민주주의가 갈 길은 뻔하다. ‘풀뿌리 정신’에 충실할수록 오히려 당선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금의환향(錦衣還鄕)’ 현상이다. 지방 출신이 내내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고위 공직을 맡는 등 출세한 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말한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¹⁰⁾ 서울에 내세를 만한 줄을 갖고 있는 이런 금의환향파가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건 이미 충분한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 정권들이 온갖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선거용 장관직을 양산해내는 관행을 지속해 왔을 리는 없잖은가. 또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후견주의 네트워크는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박종

9) 이 3대 관행의 도출 근거는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화제성과 중요성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언론이 그 화제성과 중요성에 충실히 부응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는 서울시민의 의식을 갖고 있던 필자가 지방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갖게 된 경험적 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직관은 이성의 반대 의미는 아니다. 기거렌저(Gigerenzer, 2014/2014)가 잘 지적했듯이, “직관은 개인의 경험과 현명한 어림셈법에 근거한 무의식적 지능이다. 합리적인 사고에는 직관과 이성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187쪽). 모든 해석학적 연구의 객관성은 상호주관성의 정도로 측정할 수밖에 없듯이(정수복, 2007), 본 연구의 객관성과 가치는 독자들의 공감과 동의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10) 예컨대, 전성원(201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향을 떠나 대차에서 서울 시민 행세하다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연고지랍시고 내려와 ‘우리가 남이냐’를 외친다. 똥 막대기만 쫓아도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한, 지역은 서울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공천 준 사람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막아도 지금보다 지역의 삶은 한결 나아질 것이다.”

민, 2000). 달리 말하자면, 중앙·지방의 경계를 뛰어넘는 ‘계급간 상층연합’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지방 엘리트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는 내부 식민지 체제를 온존시키는 주요 동력 중 하나다. 지방 엘리트는 지방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건 마음만 먹으면 지방을 떠나 중앙으로 갈 수 있는 물적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등 장소 구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부 식민지 체제에 대해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는 ‘암묵적 승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준만, 2015b). 특히 지방엘리트들 가운데 ‘토호(土豪)’로 불리는 이들은 지역에 ‘일종의 유사봉건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맹주’로 군림하며, 지방자치제는 ‘토호들의 반사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민일보, 2008; 김주완 2005, 2006, 2010; 이국운, 2004).

이런 일련의 현상에서 엿보이는 서울과 지방의 관계는 인질로 잡힌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폭력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강자의 논리에 동화되어 인질범의 편을 들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행태를 보이는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과 비슷하다. 게다가 지방에서 벌어지는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는 지방 전체로 보면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지역별로 서로 가져가려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유발 요인이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의 자생력 약화다. “지역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들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Spayde & Walljasper, 2001/2004, 148쪽),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지역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에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구성의 오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이익엔 충실하지만, 그런 충실함의 총합은 전체 지방의 이익에 반하며 지금과 같은 식민지 체제를 강화시킨다.

중앙 언론은 ‘지방=중앙 정치의 식민지’ 현상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지만, 이는 사실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현상은 중앙 언론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주요 관심도 모든 언론이 중앙 권력에만 주목하는 가운데 지방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략 공천’ ‘중진 차출’ ‘거물 영입’ ‘경선 흥행’ ‘정권 심판론’ ‘야권 연대론’ 등에 집중됨으로써 ‘무늬만 지방자치’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전상인, 2014).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서울 미디어들이 장악한 상황에선 지방이 독자적인 의제설정을 해나가는 게 매우 어렵다.¹¹⁾ 지방 언론이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에 몰두하는 건 개

11) 이 같은 일은 수도권 내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인천에 사는 문화평론가 정지은(2014)은 이렇게 말한다. “영등포와 신도림에 새로 생긴 대형 몰 개점 소식보다 연수동에 생긴 대형 몰 소식을 나중에 아는 인천 시민이 태반일 것이다. 단 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마저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나머지 정보의 비대칭성은 훨씬 심하다. 서울보다 인천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단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지역언론학자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거나 비판하는 데에만 머무르는 건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이젠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토호는 지역언론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박주현, 2018; 박주현·김주완·오한홍·정찬홍·문주현, 2018). 토호로 인한 지방자치체의 왜곡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소통의 문제임에도 지역언론학은 이를 거의 외면한 채 미디어 중심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만 집중하고 있다. 토호와 지역의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를 다루는 건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영역이라고 서둘러 포기할 게 아니라 미디어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언론학도 적극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지역정치의 문제는 연고단체, 관변단체, 시민운동, 청년 문제와 직결돼 있다. 연고단체와 관변단체는 어떤 식으로 기존 정치를 유지·강화시키고 있는가? 시민단체와 청년은 왜 그런 현상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탐구는 지역언론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지역 내의 공적 소통을 질식시키는 원인 규명이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2)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성연철, 2019, 1, 10). 보수 정치인 홍준표도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했고(조의준, 2015, 3, 14), 중도 정치인 안철수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린다”고 했다(최서윤, 2016). 이렇듯 진보·보수·중도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치인, 더 나아가 거의 모든 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은 한국의 오랜 발전전략이자 교육목표였다(김준만, 2016). 개천은 낮은 경제적 계급과 아울러 지방을 가리키는 은유였다. 농어촌에서 서울로 가 성공한 사람이 전형적인 ‘개룡남’이나 ‘개룡녀’로 간주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제사회에선 ‘개천에서 난 용’이었기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속담을 넘어서 그간 한국 사회를 움직인 기본 모델이자 심층 이데올로기로서 무게와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은 고성장 시대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이룬 ‘코리언 드림’의 기제였지만, 동시에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서울 초집중화(hyper-centralization)와 지방의 내부 식민지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천에서 난 용’들은 자신을 배출한 개천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데에 앞장섰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

많은 나 역시 연남동, 경리단길 같은 서울의 뜨는 동네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인천의 어느 지역이 뜬다더라’는 구절으로 통용될 뿐 뉴스로 생산되지 않지만, 서울의 ‘힙한’ 지역 이야기는 지겨울 정도로 많은 매체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들과 대부분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지방 출신이었음에도 지방을 희생으로 '서울 공화국'이 탄생한 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으랴.

그간 지방은 개천을 자처하면서 서울에서의 '용 키우기'를 지역인재육성전략이자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서울 명문대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 고교에 장려금을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에 학숙을 지어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학생을 서울로 많이 보내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를 지역인재육성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으로 삼은 셈인데, 그게 어이없다고 웃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대학이 죽는 건 지역의 손실이지만,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건 지역민의 이익이다. 각 가정이 누리는 이익의 합산이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성의 오류'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 서민층 학부모마저도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꿈을 꾸기에 그런 지역발전전략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민들은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는 걸 진보로 생각할 뿐, 개천에 남을 절대 다수의 미꾸라지들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다. 아니 오히려 차별을 한다. 나름 뜻한 바 있어 서울로 가지 않았거나 서울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에서 일해 보려는 청년들을 '루저'로 보면서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일삼는다.¹²⁾ 더 어이없는 건 청년들을 내쫓아 청년들의 인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역 정치에서 청년 배제 현상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청년층에 무관심하며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만 치중한다(김원진, 2016, 2, 19).

정부가 추진한 2018년 대학 정원 감축의 75%가 지방대에서 이뤄졌지만,¹³⁾ 지방에서 별 반발이 나오지 않은 건 "내 자식 서울로 보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서울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는 서울의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일 텐데, 정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이 내세우는 핑계인 대학평가 결과 '인서울' 대학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지방

12) 이에 대해 변진경(2018, 189, 220쪽)은 이렇게 말한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 하면 '중뿔난다'는 지적만 받는다. 지방의 왜곡된 공동체성은 때로 도시의 익명성보다 무섭다. 무엇보다 그저 나고 자란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청년들을 '남아 있는' 패배자로 바라보는 눈길에 지방 청년들은 분노하면서도 주눅 들어 있었다. (중략) 지역사회 스스로가 그곳에 사는 청년들을 서울에 '못' 간 잔류자로 바라보는 시선 아래에서 지방 청년들은 청년기에 큰 상처를 입고 시작한다."

13)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인 서울의 대규모 대학 9곳(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홍익대)는 2013년에 건위 2018년 365명의 정원을 줄여 감축률이 1.1%에 불과했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으로 되레 정원이 늘었다(황춘화, 2018, 6, 5).

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긴데, 이는 인서울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과 무관하다는 전제하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우수하니까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우수하다”거나 “우수하지 않으니까 지방에 있고 지방에 있으니까 우수하지 않다”는 식의 동어반복(同語反覆)이다.

지역언론은 이런 현실에 적극 영합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부 지역언론이 심혈을 기울여 보도하는 고정적인 뉴스 아이템 중 하나는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지역 현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지역 출신이 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의 고위직에 오르면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상세히 보도한다. 정부의 인사가 있을 때엔 축각을 곤두세우면서 자기 지역 출신의 수를 세기에 비뻔다. 그 수가 많으면 곧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적거나 없으면 ‘지역 홀대론’을 내세우곤 한다. 인터넷 포털에서 ‘홀대’를 검색해보면 각 지역별로 앞 다투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언론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언론을 탓하는 것으론 결코 교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은 지방민들이 내면화한 심층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은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가 한 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언론학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지역언론에게 수용자의 절대 다수의 뜻에 반하는 보도와 주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임을 잘 알면서도 오직 당위론을 앞세운 비판에만 충실해야 하는가? 지역언론학이 대학평가 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 더 나아가 대학 서열화의 근본 원인인 임금 격차 문제를 포함한 노동정책까지 건드리는 건 학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탈인가? 우리는 미디어 연구자이기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가 아닌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소홀하다면, 그 문제를 앞세운 ‘학문의 가로지르기’야말로 지방소멸을 저지하는 데에 절실히 요청되는 게 아닌가? 언론에게 언론비판이 금기시되듯이, 혹 우리 역시 대학비판을 금기시하는 건 아닐까? 대학 전반의 연구문화에 대해선 드물게나마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류용재, 2014), 지역대학의 지역과의 관계와 그와 관련된 연구문화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3)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

지방민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글로벌화 된 소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할 때에 어떤 정체성을 택할 것인가? 지

방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형마트(대형쇼핑몰 포함)의 진출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진 것이 시사하듯, 이 질문은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형마트는 기존 지역상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져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신승철, 2016).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비해 그 역사가 앞선 미국에서도 오랜 고민이었다. 학자들이 대형마트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지역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하며, 투표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없던 시절 작은 가게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소통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감소했으며, 이는 지역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다(Boyle & Simms, 2009/2012; Brown, 2009; Goetz & Rupasingha, 2006).

그간 ‘소비자(consumer)’는 ‘시민(citizen)’에 비해 비교적 이기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져 왔지만, 그런 구분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시민의 소비자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개인화된 정치(personalized politics)’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로컬 이슈와 글로벌 이슈가 충돌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된 탓도 있다(Shah et al., 2007; Ward & De Vreese, 2011). 이런 변화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이용하여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 상품의 소비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정치적 소비자운동(political consumerism)’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와 동일시되는 의식을 확산시키면서 시민적 정체성이나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대형마트와 체인점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마강래, 2017, 231쪽), 문제는 지역민들이 이런 해법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⁴⁾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은 추상적 이상인 반면, 나의 소비생활은 구체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선 지역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올수록 편리하고 풍요로운

14)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형마트 입점엔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2017년 경기도 양평군의 롯데마트 입점에 지역상인회는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양평군민의 86.3%는 찬성했으며 반대는 12.6%에 그쳤다(김현술, 2017, 11, 9). 2018년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선 창원 시민의 63.4%가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경국, 2018).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지만, 이런 개인적 이익의 총합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 오류를 둘러싼 논쟁도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장기적인 지역 이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발언에 임하면서 지역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지역발전에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많은 지방민들이 대형마트를 '문화 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¹⁶⁾ 지금의 역외유출이라거나 일자리 감소는 이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지역민심을 잘 아는 지역언론은 대형마트의 진출에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찬반 양측의 행동을 '사건'으로만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건 성향을 보이는 언론사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엔 대형마트의 진출을 공격적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언론 연구자가 내용 분석을 할 만한 주제로서는 약하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지역언론학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디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기존 양적 분석 방법론의 한계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급팽창도 같은 이유로 외면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소비자 정체성을 앞세우면

15) 2017년 전주에선 대형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지역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그걸 반대하는 전주 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 지역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 공간을 통해 찬반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대형쇼핑몰 유치 반대파의 주장은 거의 없었고 찬성 일변도였다. 찬성파의 주장을 몇 개 감상해보자. 이 주장들은 원도연(2017, 11, 13), 정용준(2017a, 11, 6, 2017b, 12, 4)의 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오늘도 전주에는 없는 브랜드여서 광주신세계 갔다 왔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청주시에 이어 천안시, 제주시에 까지 인구 밀리게 생겼습니다.", "중소상인을 위해 전주 시민들이 이용할 대형마트가 없어서 서대전역 옆에 있는 ****로, 부여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또 서울로 쇼핑을 다녀야 되겠소? 전주시에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전주시장님 천안 터미널 가보세요. 마트, 백화점, 터미널이 결합된 복합공간입니다. 폴더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적절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섬 전체가 세계문화 유산인 제주도 40만 도시 제주시만 가 봐도 고층 오피스텔 호텔이 지어지고 면세점 호텔 복합쇼핑몰이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별지 않아 인구도 전주를 추월 할 것 같네요.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빛나야 하는데. 시장만 빛나는 도시 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도시나 광주 대전 청주에서는 지금 전주와 같은 행정을 원하겠지요. 왜냐? 대한민국의 한정된 파이로 전주에 투자될 몫이 줄어들거나 나뉘어질 것 같겠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호텔 쇼핑몰이 없어야 충남 부여, 광주, 대전으로 쇼핑과 문화생활 즐기러 오거나 이사 오겠지요. 시대 트렌트를 쫓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만 가증됩니다."

16) 2018년 군산에서 롯데몰 개장으로 인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분석집 풍경을 보자. 롯데몰 때문에 죽을 맞인데도 분석집 점원 6명 모두 "시간 내서 꼭 (롯데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롯데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맞지만 군산에도 이런 복합몰이 생겨 좋다. 지방 사람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시춘기 이상의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이었다(김영주, 2018, 5, 9).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은 좀 다를까 싶어 필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놀랍게도, 아니 어찌면 당연하게도, 대형 쇼핑몰 유치에 반대하는 학생보다는 찬성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찬성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문화공간론'을 역설했다. 2019년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도 대형쇼핑몰 스타필드창원 개점과 관련해 "창원시민이 언제까지 부산에서 쇼핑을 해야 하느냐"며 "복합문화시설이 창원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도원, 2019, 3, 24).

서 보이는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 의식, 그리고 소비자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소비자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방법(김정은·이기춘, 2008, 2009; 천혜정, 2013) 등은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주제이며, 심층면접 등과 같은 질적 분석의 대상이 아닐까? 최근 들어 지역연구와 관련해 그런 질적 분석이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 크게 반길 일이지만(김지영, 2017; 장부배, 2016; 최종렬, 2017), 지역언론학에서 질적 분석은 여전히 희소한 편이다. 이제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학도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왕성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대형마트의 문제는 지역언론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역성 개념을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언론은 소득 역외유출과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지만, 대형마트가 그 문제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다. 대형마트의 진출에 어떤 입장을 취하건 중요한 건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과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는 지역언론학이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연구 주제가 아닐까?

4. 결론

“지역언론 연구는 언론학의 한 분과로서 대등한 대우와 인정을 받기보다는 제도적 지분을 일정 정도 보장받는 ‘보호학문’이자 학문적 변방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임영호, 2008, 10쪽). 이런 진단이 나온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논문이 요구하는 형식의 독재라는 이유를 빼놓을 수 없다. 중앙집중화의 위계는 학문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이 풍성한 주제들은 중앙 편향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지역언론 연구가 그런 편향성에 의존하는 순간 변방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중앙 집중 체제는 제도와 법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의식과 관행의 문제도 있다. 의식·관행은 제도·법을 떠받치는 보루이기 때문에 둘은 분리될 수 없다. 학문적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미디어 이외의 나머지 사회를 짚은 어둠 속에 놔두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의식·관행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지역언론학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 중심의 양적 분석으로 의식·관행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마저 미디어 중심주의가 그런 접근을 협소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역언론학이 다른 분과에 비해 미디어 이외의 나머

지 사회를 짊은 어둠 속에 뇌뒤선 안 될 필요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맥락과 유리된 채 지역 미디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지역언론은 물론 지역언론학도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있음을 밝히면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3대 ‘구성의 오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언론학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탈(脫)지역공동체적 소비 등 세 가지 관행은 지역의 이익과 개인이나 가족으로서의 지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구성의 오류’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언론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구성의 오류’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언론학이 ‘미디어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지역언론이나 지방소멸과 관련해 제도와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앙집권적 전통에 의한 지방자치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제도의 도입만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배유일, 2018).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의식과 관행의 경로의존성이며, 미디어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질적 연구의 왕성한 도입과 더불어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대안을 모색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과학’의 이름을 앞세운 기존 논문 형식의 독재다. 우리는 논문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캐물기에 비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비의 수혜를 받았을 때 집요하게 연구비 사용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형식성에 진절머리를 내면서도 논문에 대해선 그와 비슷한 요구를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원래 논문은 그렇게 쓰는 것”이라는 경로의존의 덫에 갇혀 있는 건지도 모른다.

최근 연구자들은 경로 문제를 ‘의존’뿐만 아니라 ‘창조’로도 해석하면서 새로운 경로 창조의 길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신동호, 2017), 이는 주로 소지역 발전이라는 비교적 작은 문제에 국한된 것이다. 그간 새로운 경로 창조의 유일한 가능성은 강한 정치경제적 위기와 충격으로 인한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s)’이라는 원론적 진단은 나왔지만(김창수, 2016), 문제는 그 전환점의 판별이 쉽지 않고 전환점으로 판단했다 해도 각 개인의 일상이 자물쇠 노릇(lock-in effect)을 해왔다는 점에 있다. 르페브르(Lefebvre, 1968/1990, 72쪽)는 혁명을 ‘일상의 종식’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혁명이 실패하는 원인도 일상에 있다고 했지만, 일상은 아예 처음부터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자물쇠이기도 하다. 모든 구조와 게임의 법칙이 잘못돼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개인적 일상의 굴레와 압박이 저항해야 할 사람들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멸은 임박한 현실이다. 우리 학자들의 연구는 그 재앙을 막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저녁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열쇠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근처엔 가지도 않은 채, 단지 밝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 가로등 밑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¹⁷⁾ 지방소멸은 미디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걸 외면한 채 고고한 상아탑식 과학탐구에만 정진해야 하는가? 우리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s journalism)’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지역언론 개혁과 지방소멸 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부작용을 염려하느라 지역언론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¹⁸⁾ 우리는 산학협동을 입에 올리는 순간에도 지역언론의 ‘절망상태’는 지역대학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그 어떤 책임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감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지역문제와 관련해 토호를 자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만, 우리 역시 사실상 ‘토호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일련의 도발적 질문들은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본 연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자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소멸과 연구자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만하지만 ‘인상 비평’의 기운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런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17) 이 표현은 스카멜(Scammell, 1999, p.728)이 영국 정치학의 문제, 즉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마케팅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전통적인 정치학적 접근에만 매몰돼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한 말을 조금 고쳐 쓴 것이다.

18) 본 연구에서 논의한 3대 구성의 오류는 ‘미디어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지만, 그런 전환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는 아직 약한 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주력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과 내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며, 그 가능성 중의 하나가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지역언론의 주요 취재원은 관(官)과 더불어 정치인이며 지역민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그 어떤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이 주요 취재원을 지역민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경로에서 탈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지역대학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대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지역언론의 개혁이나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엄정한 현실 인식이 요구된다. 지역대학의 언론·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자구책 차원에서 그런 개입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지역대학은 학생과 시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넛지(Nudge)형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며, 지역언론이 본격적인 솔루션 저널리즘을 새로운 지역언론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넛지-솔루션 저널리즘(Nudge-Solutions Journalism)’은 지역민의 일상적 삶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우위의 미디어 모델로서 언론 못지않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대학의 살 길인 동시에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국 (2018, 1, 23). 스타필드 창원 지지자 모임 “민주당 현장 조사 내용 부실”. 〈뉴시스〉.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23_0000210786&cID=10812&pID=10800
- 강정운 (2014, 6, 10). ‘地方선거 아닌 지방선거, 이대로 계속해야 하나.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9/2014060903944.html
- 강준만 (2008).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자치·지방문화·지방언론의 정치학〉. 서울: 개마고원.
- 강준만 (2015a). 〈지방식민지 독립선언: 서울민국 타파가 나라를 살린다〉. 서울: 개마고원.
- 강준만 (2015b).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고착시키는 일상적 기제: ‘대학-매체-예산’의 트라이앵글. 〈사회과학연구〉, 54집 2호, 113-147.
- 강준만 (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집 2호, 319-355.
- 강준만 (2019). 〈바베평공화국: 욕망이 들끓는 한국 사회의 민낯〉. 서울: 인물과사상사.
- 경향신문 (2014, 6, 9). [사설] 지방선거의 진짜 패자는 지방자치다.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82026345&code=990101
- 경향신문 (2018, 4, 26). [사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52106005&code=990101
- 구형건·박정숙·정재웅 (2015). 규범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의 기원. 〈경영사학〉, 30집 1호, 111-136.
- 국민일보(2008, 7, 20). [사설] ‘돈봉투’를 한나라당 간판 삼을 셈인가. 〈국민일보〉.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323076>
- 권승준 (2018, 1, 20). 시골만큼 심각한 ‘도심 소멸’... 20년 뒤에 부산 영도는 없다?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01506.html
- 권장원 (2012). 한국 방송정책위원회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40.
- 권장원 (2017). 신제도주의 관점에 입각한 지역 방송 정책 지향점 모색에 대한 연구: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 입각한 지역 방송사의 경영 및 조직 특성, 제도화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권 4호, 5-40.
- 권혁남 (2008, 1, 21). 광고 홍보비 빨대대고 기생하는 신문 몰아내야. 〈전북일보〉. URL: <http://www.>

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55492&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7

- 김경일 (1998).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쟁점: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지승중 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213-264쪽).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만흠 (2006). 한국 지방정치의 특성: 중앙집중의 소용돌이와 지방정치의 빈곤. <사회과학연구>, 45집 2호, 1-25.
- 김성수 (2013). 한국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이해: 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0권 3호, 69-99.
- 김영주 (2018, 5, 9). 군산 롯데몰 개장에 “환영” “260억 보상 먼저” 조각난 민심.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2605606>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18권 3호, 146-191.
- 김원진 (2016, 2, 19). 서울 밖에도 청년이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죄, 꿈의 가짓수부터 달라요”.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2182208305
- 김재영·양선희 (2015). 지역방송 연구에 관한 종합적·분석적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 15권 1호, 162-194.
- 김정은·이기춘 (2008). 소비자시민성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19권 1호, 47-71.
- 김정은·이기춘 (2009). 소비자시민성의 구성요소와 소비생활영역별 차이 분석. <소비자학연구>, 20권 2호, 27-51.
- 김종석·강은숙 (2013). 경로의존성, 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정책: E. Ostrom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권 2호, 169-195.
- 김주완 (2005). <토호세력의 뿌리>. 마산: 불휘.
- 김주완 (2006).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 마산지역 토호세력의 뿌리. <시민과세계>, 9권, 60-80.
- 김주완 (2010). 지방의 권력구조와 토호세력. <황해문화>, 69권 겨울, 84-103.
- 김지영 (2017). <지방대학 여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인식: 내러티브 탐구와 조사연구의 순차적 통합>. 전 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6). 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0권 1호, 135-159.
- 김현술 (2017, 11, 9). 양평롯데마트 여론조사, 적극 찬반표명 군민 중 ‘86.3%’ 입점 찬성. <일요신문>. URL: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8648

- 남궁협 (2018). 지역에서 대안적 독립언론 상상하기: 급진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 <언론과학 연구>, 18권 4호, 36-71.
- 류용재 (2014). 대학의 연구문화 낮설게 하기, 그리고 성찰적 대안의 모색.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1호, 4-24.
-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서울: 개마고원.
- 마강래 (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서울: 개마고원.
- 문종대·안차수 (2013). 디지털 구조조정 시대의 지역신문 생존전략. <언론학연구>, 17권 2호, 33-61.
- 문종대·이강형 (2005). 내부 식민지로서의 지역방송 재생산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175-208.
- 박동숙 (2008).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학술논문쓰기: '객관적 글쓰기' 틀의 제약. <언론과 사회>, 16권 4호, 115-141.
- 박종민 (2000). 집단이론, 후견주의 및 도시의 리더십. <한국행정학보>, 34권 3호, 189-204.
- 박주현 (2018). 토호 이익 쫓는 언론, 그들의 잘못된 만남. <사람과언론>, 3호, 83-89.
- 박주현·김주완·오한홍·정찬홍·문주현 (2018). 특별기획 인터뷰: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 <사람과언론>, 3호, 20-54.
- 배유일 (2018).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서울: 문우사.
- 변진경 (2018). <청년 흡발 보고서>. 서울: 들녘.
- 변창흠 (2018, 6, 7).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62052015
- 성연철 (2019, 1, 10). 문 대통령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겠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77778.html>
- 신동호 (2017). 경로의존론과 지역회복력 개념: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권 1호, 70-83.
- 신승철 (2016).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 서울: 위즈덤하우스.
- 안수찬·민혜영·장바울·박재영 (2015).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메타 분석: 1990~2014년 국내 12개 언론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246-280.
- 오윤주 외(2018, 8, 10). 지방 대도시도 인구 무너진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7032.html>
- 원도연 (2017, 11, 13). 전주를 전주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전북일보>. URL: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132>

- 원용진·황상현 (2011). 지역방송 연구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0년부터 2010년 발표논문들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285-332.
- 유선중·노민지 (2018).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인구·가구·주택>.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윤성민 (2016, 3, 17). 젊은 여성 급감... 지자체 80개 '소멸' 위기. <국민일보>.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6331&code=11131100&cp=nv>
- 이국운 (2004). 행정수도 이전 찬반론의 함정들: 분권화 속에 숨어 있는 중앙과 지방의 동맹. <당대비평>, 27권, 157-168.
- 이기우 (2017, 1, 19).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대로 지켜라.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3054.html
- 이상빈·박은병 (2010).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57권, 345-370.
- 이한용·엄기열 (2010). 지역언론의 지역주의적 보도성향에 관한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 470-501.
- 임영호 (2002). 공간 이론을 통해 본 한국 방송학의 정체성 문제: 지역방송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275-303.
- 임영호 (2008). 지역언론학의 학문적 정체성: 쟁점과 진단.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5-36.
- 임영호 (2013). 한국 언론학의 제도적 성공담과 내재적 위기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1호, 6-38.
- 장부배 (2016). <극지에 서지 않은 청년들: 지방 K대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호순 (2015). "종속"과 "배제": 한국 지역방송의 내부식민지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5권 2호, 375-411.
- 전상인 (2014, 2, 26). 지방선거에 地方이 없다. <조선일보>. UR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5/2014022504447.html
- 전성원 (2018, 6, 12). '이부망천'.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12137005
- 정도원 (2019, 3, 24). 창원성산 토론회 키워드 ... '경제파탄'·'탄핵인정 여부'·'노회찬 정진'. <데일리안>. URL: <https://www.dailian.co.kr/news/view/781964>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나무.
- 정용준 (2017a, 11, 6).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전북일보>. URL: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574>

- 정용준 (2017b, 12, 4).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2. <전북일보>. URL: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59&sc_section_code=S1N9
- 정인숙 (2013).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75-108.
- 정준호 (2006). 경로의존성과 지역발전경로: 안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 410-430.
- 정지은 (2014, 2, 10). 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다.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2092028155
- 조영태 (2018, 10, 11). 식상한 인구 이야기.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3036583>
- 조의준 (2015, 3, 14). “저소득층 더 돕는게 진정한 복지”.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4/2015031400219.html?news_HeadRel
- 조항제 (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개념적 접근.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275-305.
- 조흡·오승현 (2012).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도가니> : 인식론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으로. <문학과영상>, 13권 4호, 837-864.
- 중앙일보 (2014a, 2, 3). [사설] 지방의원 수 늘린 정치권의 후안무치.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13787003>
- 중앙일보(2014b, 6, 6). [사설] 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치 식민지 벗어나라.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14889508>
- 채오병 (2017). 역사 반복의 경로의존: 전간기 일본과 탈식민 한국의 국가주의. <사회와 역사>, 115권, 197-243.
- 천혜정 (2013).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 <사회과학연구논총>, 29권 1호, 383-416.
- 최서윤 (2016, 6, 22). 안철수 '개천서 용 나는 공정경쟁구조 만들어야'. <스포츠서울>. URL: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06270>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최종렬 (2017). '북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1권 1호, 243-293.
- 최현주·이강형 (2008). 지역 언론학 연구의 동향과 특성: 1960-2008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37-67.
- 한선·이오현 (2011). 지역신문 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 광주지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410-435.

- 한선·이오현 (2012). 지역방송의 지역성 개념과 지역성 구현의 문제: 광주지역 방송생산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271-306.
- 황용석 (2011, 12, 28). SNS 규제와 경로의존성.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12272059045
- 황춘화 (2018, 6, 5). '지방대 몰락' 막는다더니...정원 감축 75% 지방대서 이뤄졌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47696.html>
- Boyle, D. & Simms, A.(2009). *The New Economics*. 조군현 (역) (2012). <이기적 경제학/이타적 경제학>. 서울: 사군자.
- Brown, D. S.(2009). Discounting Democracy: Wal-Mart,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Voter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SSRN's eLibrary*, 1-43. <https://ssrn.com/abstract=1398946> or <http://dx.doi.org/10.2139/ssrn.1398946>
- Goetz, S. J. & Rupasingha, A.(2006). Wal-Mart and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8(5), 1304 - 1310.
- Cassidy, J.(2009). *How Markets Fail*. 이경남 (역) (2011). <시장의 배반>. 서울: 민음사.
- Curran, J.(2011). *Media and Democracy*. 이봉현 (역) (2014). <미디어와 민주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Gigerenzer, G.(2014). *Risk Savvy*. 강수희 (역) (2014). <지금 생각이 답이다>. 서울: 추수밭.
- Goodwin, C. D.(2014). *Walter Lippmann: Public Economi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nderson, G.(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박행웅·이종삼 (역)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 Keynes, J. M.(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 Lefebvre, H.(1968).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 (역) (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세계일보.
- Scammell, M.(1999). Political Marketing: Lessons for Political Science. *Political Studies*, 47(4). 718-739.
- Sewell, W.(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T. McDonald (Ed.),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pp.245-280).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hah, D. V., McLeod, D. M., Kim, E., Lee, S. Y., Gotlieb, M. R., & Breivik, H.(2007). Political Consumerism: How Communication and Consumption Orientations Drive “Lifestyle Politic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1(1). 217-235.
- Spayde, J. & Walljasper, J.(2001). *Visionaries: People and Ideas to Change Your Life*. 원재길 (역) (2004). <틱낫한에서 촛스키까지: 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전망>. 서울: 마음산책.
- Tilly, C.(1984).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Huge Comparis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ard, J. & De Vreese, C.(2011). Political consumerism, young citizens and the Internet. *Media, Culture & Society*, 33(3). 399-413.

최초 투고일 2019년 4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29일

Abstract

Local Media Research Trapped in the Path Dependency

Three Major 'Fallacy of Composition' That Accelerate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Joon Mann Kang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ang Min Jeon

Ph. D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 lot of studies tend to focus on only local media separately from structural context of Korean society although local media study is much more necessary not to leave the society other than media in the darkness compared to other disciplines. If local media research deals with overall local communication phenomena beyond media, it will not only enrich the research topics but also be possible to deeply analyze the issues that can not be identified or solved by media research alone. Nonetheless, why should we stick to the media alone? This study, which started from this awareness of a problem, reveals that not only the local media but also the local media research are trapped in the path dependency, calls attention to the three major 'fallacy of composition' that accelerate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and suggests that local media research actively respond to them. Three practices, such as local politics for access to center, education based on the model of fulfilling 'rags-to-riches', and consumption transcending the local community interests, stimulate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by generating 'fallacy of composition', a condition of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local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interests of local people as individuals or famili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local media do not raise questions about this dilemma, or contribute to 'fallacy of composition' and emphasizes that the local media research needs to shift from 'media research' to 'communication research.'

Keywords: local media,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internal colony, path dependency, fallacy of composition